

보 도 자 료

| | |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qualact2017@gmail.com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rcomm2017@gmail.com (인권운동더하기) |
|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공동행동 진행해 |
| 발 송 일 | 2020년 12월 10일(목) (총13쪽)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4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전국 53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3.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2주년입니다. 매년 세계인권선언일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드러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 1조를 새기며,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비롯한 공동행동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오후 1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존엄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이어지는 여러 투쟁과 외침을 드러냈습니다.
5.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올해의 인권 이슈를 함께 알리며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의 공동행동(7272공동행동)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광주, 대구, 울산, 전주, 충남지역에서도 함께 한 행동 영상을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한 행동을 이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6. 그리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지난 4주 동안 목요일마다 진행해온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지하철행동에 함께 한 분들, 그리고 오늘 7272공동행동에 함께 한 분들이 모여 소감과 다짐을 나누는 마무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외침이 더 널리 전해지도록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진행안+사진+발언모음+기자회견문

[첨부2] 7272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지하철행동 기자회견 진행안+사진+발언모음

[첨부1]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진행안+사진+발언모음+기자회견문

□ 진행안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사회 : 예정(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운영위원)

- 인권의 외침 :
 - 외침1. “과거사 진상규명 더는 늦출 수 없다”
: 김하중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회장)
 - 외침2.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에 합류하라”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외침3.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외침4.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외침5.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외침6. “재난의 시대, 우리에게는 권리가 필요하다”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코로나인권대응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사진





□ 발언모음

- 외침1. “과거사 진상규명 더는 늦출 수 없다” : 김하종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회장)

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특별법 추진위원장 김하종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학살은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행위입니다. 우리 유족은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으며 진실이 무엇이었던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는 특별법을 도입하여 집단 희생자 사건에 대한 배·보상과 유해 매장지에 대한 유해 발굴, 과거사재단 설립 등 지속적인 화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용서를 구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아픈 상처는 치유하지 않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민간인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가해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여, 우리 모두가 손잡고 미래를 향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외침2.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에 합류하라”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세계인권선언 제2조, 우리 헌법도 10조 다음에 바로 11조가 오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인권, 기본권 목록 맨 앞에 나옵니다. 아무리 멋진 인권이 선언되어 있어도 누군가 그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모두가 존엄하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언제나 완성되어가는 권리며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재구성하기 위한 주요 렌즈가 바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고용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투쟁을 통해 그동안의 노동권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이고 반쪽짜리였는지가 드러났으며 그 과정을 통해 노동권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자유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폭로하는 투

쟁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이동권이 더욱 증진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가 이와 같은 차별을 알 수 있게 만듦으로써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증진시키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차별에 맞선 투쟁이 인권의 내용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이러한 평등정신에서 도약의 해일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인권위도 평등법 시안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재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차제연은 평등버스를 타고 인권의 빈 부분을 증언하고 고발하여 인권을 재구성하려는 이야기들을 들으러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월 10일 민주당은 아직도 답이 없고 국회는 1개의 법안을 상정한 채 멈춰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만이 뒤쳐진 채 이대로 인권의 날을 맞이하는 일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기 인권의 새 목록을 써가고 채워나가고 있는 이 힘으로 복지부동한 국회와 정부를 끌고 나갈 것. 정부와 국회는 제 할일을 하십시오. 평등정신을 온전히 담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바로 제정하기 바랍니다.

- 외침3.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 72주년이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2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가슴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호 수많은 화재 등등의 재난참사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산재사망 제일 많습니다. 2400명 너무도 많지만 그 숫자 안에서조차 빠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아 3조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듣는 말 “너가 잘못해서였지”입니다. 기업은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 한해 10명씩 사망하는 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입니다.

산재 일으킨, 재난참사 일으킨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죽음을, 시민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만들려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낙연 당 대표가 약속했고 민주당 발의했고 국민의 힘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안소위에서 법사위에 제출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마쳤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꼭 통과되서 김용균 노동자의 묘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얹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지 않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금지법으로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가 시민이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사회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 외침4.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앞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전히 인권을 외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다. 저는 그중에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기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낙태죄’는 그동안 국가가 ‘처벌과 허용’이라는 이원화 체계를 두어 정부의 인구 정책에 따라 국민의 성과 재생산, 그에 따른 삶 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 다. 국가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칠 때는 임신중지를 장려하며 정부 주도의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고, 국가 정책으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국민과 낳지 말아야 하는 국민을 선별하여 한센인 강제 단종·강제 낙태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던 ‘낙태죄’가 문제로 드러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온 시민들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쳐온 이유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시한 내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수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결과였고, 우리는 인권의 외침에 따라 더 이상 ‘낙태죄’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7일 임신중지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대신 ‘낙태죄’를 존치하고,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 등 접근성을 낮추는 법적 장벽을 만들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을 뿐 그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활동가들을 경찰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5개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소관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전체의 2/3인 4건입니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사회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1988년에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를 의료 서비스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책임 전가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벌조항,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진료 거부 허용 같은 법적 장벽은 저소득·저교육층,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의료 취약 지역 거주

자 등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더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따른 현실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특성 및 욕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이제 와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낙태죄’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권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가 ‘낙태죄’ 폐지라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을 외치고 싸울 것입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은 어떤 세상일지 함께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외침5.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유엔 회의에 가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미세먼지 없애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나오고 재벌 대기업들이 전기차, 태양광과 같은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친환경 상품을 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후위기가 왜 인권의 문제인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인지 가닥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6일 열린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통해 인권의 문제로서 기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건설노동자,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청소년이 참석했습니다. 건설노동자, 농민의 이야기를 통해 옥외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냉해, 폭염, 장마와 같은 이상기후가 늘어나서 작물 생산량은 널뛰기를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석탄발전 노동자, 청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석탄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석탄이라는 에너지 전환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결코 전환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돈벌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기후행동 활동을 열심히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특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기특하다면서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청소년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를 우리 삶의 문제로, 인권의 문제로 이미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행동을 조직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다른 세상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외침6. “재난의 시대, 우리에게는 권리가 필요하다”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코로나인권대응네트워크)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2020년 12월 10일은 장애계에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탈시설지원 법안을 발의한 날입니다. 오늘은 탈시설을 위한 날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하던 2월 청도 대남병원의 98%가 확진되고 7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단일 기록으로는 최대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도 장애인은 집단으로 묶어 코호트 격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이상 장애인은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주거, 인권을 생각할 때 장애인은 6인 1실, 8인 1실에서 함께 뒤엉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모든 인권을 의탁한 채 살아왔습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정말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임신중지, 장애인 탈시설,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인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이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의 날 12월 10일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차별과 억압,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가장 먼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완전히 탈시설하여, 함께 교육받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먹고, 함께 나이들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21대 국회는 탈시설 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정부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라!
투쟁!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문 -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72년 전,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 위에 전후 인류가 함께 할 공통의 가치로서 인권을 다시 세웠듯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공통의 가치를 다시 정비해야 할 엄중한 책임 앞에 와 있다. 전후 체계들이 그 한계를 다했다는 증거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깊어진 격차의 골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위기와 재난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나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모습은 원칙 없이 흔들리고 발등의 불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존엄의 훼손을,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내세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깨웠다. 위기를 극복해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

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존엄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열망과 실천의 의지를 담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과제를 확인한다. 누구나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해온 억압과 착취, 차별의 구조를 깨고, 피해자의 곁에 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열 것이다. 위기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하며 또다시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는 국가와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우리는 외친다.

하나. 재난의 시대, 인권은 필수적이며 절실한 것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한 대응을 촉구한다.

하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중대 인권침해와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모두의 평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하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시작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하나.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가 나서자.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2]

세계인권선언일 7272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지하철행동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된다” 진행안+사진+발언모음

□ 진행안

7272공동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지하철행동 마무리 기자회견
“인권의 외침은 계속 된다”
 2020.오후 4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 발언 : 7272공동행동 참가자 3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하철행동 참가자 2인
 지희 (지하철행동 참가자)
 사월 (다산인권센터)

□ 사진



□ 발언 모음

- 발언1. 장하나 (7272공동행동 참가자/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엄마들과 함께 정치하자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는 장하나입니다. 한해가 끝나가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세상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

기에 마음이 참 조금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다보니 아이들도 이 사회의 소수자로 아이들도 배제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 나조차도 아이에게 고압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반성하며 나부터 바뀌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방법을 택한 건 평등이, 차별 없는 세상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폭력이라고 말했는데, 폭력은 범죄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없이, 마치 차별과 혐오가 합법적인 것처럼 자행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처럼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 공간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버젓이 만행되고, 책임 있는 성인들은 그걸 가만히 방치하는 상황에서 지역 곳곳 인권조례들이 계속 제정운동 있어왔는데, 그에 비해 차별금지법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방치된 이런 상황은 정치인들이, 성인들이 조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인데 6살인 딸도 제가 살아온 40여 년처럼 산다고 생각하니 참 끔찍합니다. 2020년, 2021년 더 이상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싫고 엄마로서 제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든 엄마들이 차별받지 않고 혐오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분들과 함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2. 김민 (7272공동행동 참가자/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김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다 끝나가고 날도 추워지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온 활동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히나 2019년, 2020년 들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국가적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 그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나 프로그램이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많은 정책이나 사회영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기술에 필요한 데이터가 차별된 데이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차별적으로 구성된, 그리고 차별이 만연하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가공이 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동화된 예를 들어 당신은 복지를 수급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이 사람을 오진 남성과 여성, 1과 0처럼 나눠 판단한다든지, 또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에 대해 취업 적절할지 판단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못된 관행으로 그 안에서 차별적인 결과 나오고 차별적 집행이 일어날 때 확고하게 그게 뿌리 뽑히고 나중에 정말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할 때 그 데이터가 차별적이지 않고 평면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구성되도록 하는 힘이 차별금지법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많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하면서 꼭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3. 치즈 (7272공동행동 참가자/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치즈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데,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사 작성을 통해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배제와 나이 차별, 노키즈존이라던가 만15세 이하 참여할 수 없다, 만18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등등 세상의 많은 것들이 청소년을 배제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생겨야 이런 나이 차별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들이 문제적이고 중요한 게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저희가 주장해온 민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

랫동안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법에는 친권을 권한 중 하나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항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핑계가 되어 왔고, 어느 누구도 맞아서 안 된다. 맞을 짓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징계권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 맞을 짓은 없다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오랜 시간 요구해온 것이 법사위 통과 안됐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이 통탄스럽고, 아직도 청소년이 가정에서 매 맞는 존재로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인권감수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해서 어린이 청소년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4. 지희 (지하철행동 참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침묵시위 지하철 액션에 참여한 서지희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차별이 너무나 만연하고 차별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차별인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그 말, 그 행동이 차별이라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고 또 진작에 제정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정말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뤄집니다. 저는 사회복지 학과를 2년 다니고 현재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처음 입학할 때 저와 마찬가지로 동기들 역시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입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과에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며 ‘니 미래 여친’이라며 서로에게 놀리는 용도로 사용 하였고 그 방에는 웃겨하며 즐기는 아이들만 있었을 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때가 학기 초였는데 정말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과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장애인 유튜버 분의 동영상 댓글에 “형 나보다 더 멋지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고 그 댓글에는 좋아요가 수백개 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예로 종편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제 또래 시각장애인 분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고정패널이 “웬만한 여자아이들보다 더 밝고 이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지만 보통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칭찬 할 때 ‘나보다 더’라는 말을 주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칭찬 할 때에는 항상 ‘나보다 더’ ‘비장애인보다 더 어떠한’ 는 비교를 붙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장애인 보다 낮게 평가하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막 놀다가 제가 한 지인의 사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그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너 완전 잘나왔지” 했는데 “오! 완전 분위기 있게 나왔네? 근데 약간 다리가 장애처럼 나와서 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지인들이 소수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면 차별적인 혐오표현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꼭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제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더군요.

tv프로그램에서 조차 남자인 사람한테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대답하는 사람은 손사레를 치며 저 그런 쪽 아니에요! 하는 것 역시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혐오가 너무나 당연하고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그 표현은 차별적인 표현이고 듣기 불편하다며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표현을 들을 때 마다 너무 불편하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간 분위기가 싸해지고 일명 ‘진지충’ 취급을 당하기 일수입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면 차별적인 혐오표현에도 웃어넘기며 재미있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비웃을 줄 알아야 집단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지만 그러한 혐오표현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듣고 계속 불편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 당사자들은 어떨지 상상도 안합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못되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가 오랜시간 주입해온 고정관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들어앉게 된 배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형성되었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이 벽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면 계속 해서 차별적인 언행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알게 되니 죄책감이 들고 불편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심할 수 있었죠.

차별금지법의 의미는 자신들이 하는 언행이 차별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지껏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언행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언행을 했을 때 최소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라도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세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인데도 이것을 제정하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위에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도 평소에 듣는 차별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마침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에서 코로나시대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위를 만들어 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라는 글씨가 크게 적힌 몸자보를 입고 지하철에 한칸당 두명씩 타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글자를 보이게 했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정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심지어 멈춰서서 한참을 쳐다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안보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힐끗힐끗 봐주셨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차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게 되면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막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제가 이 시위에 처음 참여한 날에는 저희가 지나갈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입은 몸자보를 보고 차별금지법이 뭔데? 하면서 검색해보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 어떤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찾아보겠다고 하시며 가신 분도 계셨고, 지하철 칸에 앉아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께서 “정말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주셔서 고맙워요”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의 인원수 대로 초콜릿과 핫팩을 사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도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뿌듯했습니다.

시위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예를 들면 여러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팻말을 들고 하는 방식의 시위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칸에 두명씩 타고 따로 그 두명마저도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뭉쳐있을 때 보다 시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응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담감도 없이

다가와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리는 역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저마다의 인권투쟁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만 문제의식을 느꼈었는데 역마다 내려서 그곳에서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듣게 되니 새삼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투쟁해온 덕분에 겨우 이정도까지라도 온 것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역들은 그저 지나가는 역이나 놀거리가 많은 곳 정도의 의미였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더욱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투쟁이었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다수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에서 배제 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했어야 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알려주는 정도의 아주 작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발언5. 사월 (지하철행동 참가자/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당연히 있어야 하는 토대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차별의 원인을 더욱 여러 요인들에서 찾아내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견고한 벽에 조그만한 흠집이라도 낼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은 제 역할을 하는 것 일겁니다.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욱더 여러 방면에서 원인을 찾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대는 분명한 힘을 발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출발점인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당연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